

유럽을 싸게 여행하고 싶은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이 있다. 「유럽을 하루 25달러로」(Europe 25\$ a day)라는 책이다. 2만원도 채 안되는 25달러로 유럽 하루살이가 가능할까. 몇년 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연수갔을 때 주말이면 이 책을 들고 유럽을 돌아다녔다. 단돈 몇 달러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 싸고 깨끗한 여관,

다.

안타깝게도 최근 국내 석유환경의 不確實性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페르시아灣사태 때문에 그렇고,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의 타결이 내년부터 국내 석유시장에는 어떤 형태로 과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하면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연히 국가의 경제운영계획이나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혼란이 오고,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며, 만일 예측한 범주 이외의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더 큰 코스트를 치뤄야 하는 위험도 따른다.

對外환경이야 이룰 수 없다는 치더라도 대내적으로

정부의 석유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유가조정문제만 해도 그랬다. 국내유가는 과연 연내에 인상될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다.

『연내에는 절대로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겠다』(李煥逸 동력자원부장관, 8월 4일)

『물가등을 고려해 연내에는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겠다』(盧대통령, 8월 14일)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李承潤 부총리 9월 19일 기자간담회)

『9~12월 도입가가 배럴당 27달러 상회시 財特자금등 별도의 대응방안 강구』(페灣사태특별대책위원회 10월 17일)

『9~12월 도입가가 25달러 상회시 국내유가 인상을 검토』(내년도 경제운영계획, 10월 25일)

아무리 뜯어 봐도 언제 얼마나 유가를 올릴 것인지, 아예 안올리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했다. 갈때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될뿐. 덕분에 언론에서는

## 石油政策 小考

李紀勳

(중앙경제신문 기자)

말상대하려고 외국여행객을 받는 상냥한 민박집들이 잘 소개돼 있어 알뜰히 유럽구경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다. 정말 책대로만 하면 25달러로 유럽 하루 먹고 자고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기억이 새롭다.

놀라운 것은 그 책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이었다. 어디에 민박집이 있다면 있었고 전화번호도 사람도 바뀌지 않았으며, 몇시에 마을버스가 다닌다면 다녔고, 요금은 책에 적힌 그대로였다. 30분 걸린다면 35분 일찍 나서면 약속장소에 5분 일찍 닿았다. 어제까지 좌회전되던 곳이 오늘은 안되고, 작년 수첩의 전화번호는 믿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려면 30분 내지 한시간은 여유있게 떠나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실은 책의 정확성 보다도 사회가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데 놀랐을 것이다. 아울러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사회가 不確實性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

11월말 혹은 12월 초라는등, 20% 혹은 35%라는등 온갖 추측보도가 난무했다. 국민을 헛갈리게 하는데 정부가 앞장선 셈이다.

내년도 국내유가는 석유사업기금 가운데 유가완충재원이 소진되면 인상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드러난 정부방침이다. 여기서 유가완충재원의 해석이 경제기획원과 동자부가 크게 다르다. 기획원은 금년도에 확보해둔 8,359억원으로 동자부는 그동안 축적해둔 유가완충자금 총 1조9천억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유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석유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注油所 상품표시제(폴 사인제) 문제를 보자. 동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상품표시제 의무화조항을 넣어 입법예고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7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뒤인 경제장관회의에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상품표시제 의무화조항이 빠진채 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항이 빠진 이유는 이렇다. 경제기획원의 公正去來法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굳이 석유사업법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위반 주유소를 제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냐. 상품표시제를 분명히 하려면 석유사업법에도 의무화조항을 넣으면 왜 안되는가. 같은 내용이 다른 법에 중복돼도 法理上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기 할 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대해 삭제됐다고 한다. 한심한 밥그릇 다툼이 아닐 수 없다.

또 들리는 말로는 관련업계의 엄청난 반발과 로비와 압력이 작용했다고 한다. 아직도 그런 행위가 통한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다시피 그동안 상품표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써 소비자는 기만당하고, 불량휘발유가

나돌아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유사는 제품품질 향상노력을 게을리하게 됐다. 반면 주유소들은 自社제품을 서로 대려는 정유사들로부터 덤핑공급받아 폭리를 취해 왔다. 이처럼 불건전한 상행위가 근절되기는 틀렸는가.

동자부는 상품표시제를 꼭 실시할 것이지만 내년에 폐灣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자부는 이번에 석유사업법안 상품표시제 조항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더라도 국회에서 상품표시제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품표시제 실시마저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차라리 이번에 빠진 것이 잘됐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업계쪽 얘기는 전혀 다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흐트러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銳鋒이 꺾인만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상품표시제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법제화 안해도 당연히 상품표시제를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상품표시제는 실시되는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다. 석유산업규제합리화방안, 나프타가격 조정문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등 산적한 에너지 현안에 대처하는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이기 일췌여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해 석유산업전반과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폐灣사태로 高油價시대의 도래가 필연시 되는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국내석유산업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부처간에 손발이 안맞는다면 관련업계의 압력과 로비가 어떻든가 하여 에너지정책이 표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자율기능으로의 과감한 정책이앙이 소망스럽다.♣